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하라

진형석 의원, 여론조사 발표... 도민 73% 명칭변경 찬성 직속기관 인지도 23.5%로 낮고, 명칭 혼란 경험 32.5%

전북도민 73%가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북 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을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과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하는 의견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이 아닌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직속기관 중 전북교육연구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원, 전북학생수련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전북유아교육진흥원은 기관명칭 앞에 전북이라는 이름만 사용하고 있어, 도청 소속기관인지 도교육청 소속 기관인지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직속기관의 이름 때문에 도민 3명 중 1명(32.5%)은 혼란을 겪은 적이 있으며, 도민 4명 중 1명(23.5%)만이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4일(월)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에 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북도민 73%가 전북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명칭을 전

북이 아닌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직속기관 중 전북교육연구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원, 전북학생수련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전북유아교육진흥원은 기관명칭 앞에 전북이라는 이름만 사용하고 있어, 도청 소속기관인지 도교육청 소속 기관인지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직속기관의 이름 때문에 도민 3명 중 1명(32.5%)은 혼란을 겪은 적이 있으며, 도민 4명 중 1명(23.5%)만이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6개 지역에 소재한 교육문화회관과 관련하여 지역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주의 전북교육문화회관과 익산의 마한교육문화회의 명칭을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75.4%)

과 익산교육문화회관(74.6%)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형석 의원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명칭 혼란 해소와 기관의 정체성 확립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이를 바탕으로 도민들께서 더 쉽게 인식하실 수 있도록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명칭변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진형석 의원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가 지난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 동안 전라북도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유효 표본 555명이 조사되었다. 조사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전화 ARS와 스마트폰 앱조사 방식을 혼용했고, 표본은 2019년 9월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지역, 성, 연령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 4.2%포인트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文 대통령 "세계 경제, 확대 균형으로 되돌려야... 아세안+3가 중심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자유무역 질서가 외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고,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세계 경제를 확대 균형의 길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며 "아세안+3가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2차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다시 보호무역주의의 바람이 거세다. 교역 위축으로, 전세계

90% 국가들이 동반 성장둔화를 겪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려도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는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비회원국이었던 한·중·일 3국 정상들 동시 초청해 처음 개최됐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의해 출범한 이후 정례화 됐다. 문 대통령은 "새들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라며 아세안+3가 처음 출범하던 당시 위기 상황을 상기시키는 말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20여 년 전 우리가 그랬다. 아시아 외환위기의 폭풍이 몰아칠 때 아세안+3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며 "위기 속에 하나가 되어, 우리는 세계 경제 규모의 30%를 차지하는 튼튼한 경제권을 만들어냈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文 대통령 · 아베, 아세안+3 前 11분 환담... 유엔총회 후 13개월만

靑 "한일 정상, 관계 중요 공감...대화해 해결 원칙 재확인"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참석 차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이하 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약 11분 가량 단독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의의 참석 전 대기 시간에 아베 총리와 별도로 환담을 가졌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환담은 이날 오전 8시 35분부터 46분까지 약 11분간 이뤄졌다.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정상들과 환담 이후 옆 자리로 옮겨 아베 총리와 별도의 단독 환담이 이뤄졌다는 게 고 대변인

의 설명이다. 고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두 나라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환담은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뉴시스

이날 환담은 통상 다자회의의 도중 배석자 없이 두 정상 간 이뤄지는 단독 회담 형태인 '풀 어사이드(full aside)' 방식과는 달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두 나라 실무자 사이의 사전 의제 조율 없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공식 외교 프로토콜에 명시된 '풀 어사이드'보다는 '단독 환담'이라는 명칭이 더 어울린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국가 정상들과의 환담을 나누던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본 뒤 '잠깐 얘기를 나눠'며 환담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25일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성사됐던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뉴시스

전북도의회-중국 강소성, 우호교류 발전 방안 모색

중국 강소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4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했다.

전북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이날 오후 도의회 외빈접견실에서 '양용' 주임 등 중국 강소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6명과 우호교류 활성화 및 양 도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송성환 의장은 이날 "전라북도의회와 강소성 인민대표대회는 교류 협약을 체결한 지 올해로 23년째이며, 그

동안 문화와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어지면서 양 지역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경협단지가 빨리 조성돼 전라북도와 강소성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및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2023 세계 챔버 대회 등에도 강소성 인민대표대회에서 관심을 두고 역할을 해 달

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소성 인민대표대회 양용 주임은 "이번 방문이 양 의회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우호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기대한다"며 "강소성 인민대표대회 역시 양 지역의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라북도의회와 강소성 인민대표회는 지난 1996년 1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뒤 양 도시를 교류 방문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기무사, 촛불집회 상황 당시靑에 보고했다"

군인권센터, 기무사 작성한 11개 문건 정보공개 청구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3년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청와대 등 보고용으로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4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11월과 12월, 기무사 정보융합실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청와대 부속실 등에 보고하기 위한 상황 보고 문서 11건을 작성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등이 청와대 부속실에,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와 '현 상황 기무사 활동 계획 보고' 등이 한 전 국방장관에게 전달됐으며, 김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등의 문서가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현 상황 관련 보고 서와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 문서 제목 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현 상황 관련 예비역 안보단체 활동과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등의 문서는 당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가 보수단체 등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울러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2016년 10월에 이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모씨에게 계엄령을 검토시킨 사실이 있다'며 "이 때의 검토 내용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

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서 볼 때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촛불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고자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폭넓은 수사를 진행하고도 국민에게 밝히지 않은 진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문건 11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계엄 문건 작성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뉴시스

좀 더 낮게, 좀 더 가까이!

민생을 살피고, 군민에게 좀 더 낮게·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주군의의회 MUJU-GUN COUNCIL